



2019년도 안보정세전망

안경모 · 이병구 · 손경호 · 하도형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간사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한 해도 평범한 해가 없었겠습니다만, 아마 올해만큼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거대한 변화가 진행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폭 만큼이나 그 속도 역시도 정말 예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분단 70년간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던 남북정상회담이 올 한 해에만 세 차례 열렸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논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우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발빠르게 한반도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이라는 말이 이처럼 잘 어울리는 한 해도 없을 듯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이전의 구질서와는 달리 갈등이 아닌 화해를, 경쟁이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보다 평화로운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수많은 위기들이 보여주듯이 준비되지 못한 평화는 구축될 수도,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기회의 창이 이면에 숨은 여러 위험 요소들에 대한 냉철하고 차분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안보정세전망과 대비방향을 간략한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간물이 한국안보와 국방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김준섭

본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종합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2019년 안보정세전망

제1장

세계정세전망

1. 정치	2
2. 군사	6
3. 경제	9
4. 사회	12

제2장

동북아정세전망

1. 정세개관	16
2. 미국의 동북아정책	18
3. 중국의 동북아정책	20
4. 일본의 동북아정책	23
5.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26

제3장

북한정세전망

1. 정치	30
2. 군사	35
3. 경제	37
4. 대외·대남	41

목차

2019년 안보정세전망

제4장

국내정세전망

- 1. 정치면..... 46
- 2. 군사면..... 48
- 3. 경제면..... 49

제5장

안보정세종합평가

- 1. 세계정세..... 52
- 2. 동북아정세..... 54
- 3. 북한정세..... 56
- 4. 국내정세..... 59

제6장

결론 및 대비방향

- 1. 대외정책..... 62
- 2. 대북정책..... 66
- 3. 국내정책..... 69

제1장

세계정세전망

1. 정치: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다자주의의 약화
2. 군사: 핵군비통제의 모멘텀 상실과 군비경쟁 심화
3. 경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제4차 산업혁명 본격화
4. 사회: 민주주의 저하 및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 증가

제1장 세계정세전망

1 정치: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다자주의의 약화

○ 미중 영향력 경쟁의 심화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 시대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큰 폭의 국방비 증액 등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지금까지 주도해 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제기하면서 동맹국의 분담금 증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공격적 대외경제 정책 등 자국 이익의 확보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대외정책 추구
- 최근 들어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한다는 대전략 하에 신형대국관계, 신안보관, 일대일로 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역내 질서 창출 지속 추구
-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의지와 역량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행사해 온 글로벌 리더십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경제 발전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에 초점
-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인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 또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 역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이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이 분절화 될 전망이다

○ 범세계적 민족주의 강화

- 2018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범세계적 민족주의 강화 움직임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와 경쟁”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의 거센 파고 아래 세계 각국에서 자유무역 등 “개방과 상호의존성 및 연결성”이 범지구적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퇴조
- 2008년 범지구적 경제위기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그리고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민 위기가 포퓰리즘적 국수주의의 준동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 BBC에 따르면, 2018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국수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최근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20% 이상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아시아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지위를 요구하는 중국과 정상국가화의 추동 배경이 되는 일본 내 민족주의가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WTO 등 다자주의 제도의 발동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 간 무역 갈등 야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가 간 공조를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 미국의 리더십 약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대비 움직임 가시화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 시대를 선언하면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으로부터의 탈퇴 및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불안감 지속적으로 고조될 전망이다
-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1차대전 종전 100돌 기념전 트럼프 대

- 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러시아 및 미국에 대비한 유럽연합 군대의 강화를 언급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반감 표시
- 프랑스와 독일은 핵군비통제의 약화 및 핵전력 확충 등 강대국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를 유럽연합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자율성 확보 수단으로 유럽군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독자적 외교 및 군사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임
 - 향후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발 범세계적 불안정성 고조 전망

○ 이란발 중동 불안정성으로 인한 범지구적 정치·경제 상황 악화

-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JCPOA를 파기하고 12개항에 이르는 새로운 요구를 함으로써 이란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 미국은 2018년 8월 7일 대이란 제재의 전면 복원을 선언. 미국은 이어 11월 5일, 이란산 원유 거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대(對) 이란 에너지·금융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을 발표
- 미국의 경제 제재 재개로 인해 이란 리알(Rial)화 가치가 최근 1년 새 70% 폭락하고, 기초 생활필수품 가격 및 실업률 폭등 등 이란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훈련 등 해협 차단을 위협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대할 경우 국제 원유 가격 상승 및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크게 가중될 수 있음

○ 예멘의 내전 및 대규모 기근으로 중동 및 유럽의 불안정성 심화

- 2018년 10월 23일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은 예멘 내 내전 지속으로 인해 약 2,900만 명의 예멘인 중 약 1,4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실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
- 6백만 명 이상이 발생한 시리아 난민 사태와 더불어 예멘 난민 사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은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정치 및 사회 불안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터키 등의 국가에서는 이슬람 급진주의가 부상하는 등 정치적 역학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 동반 증가
- 시리아 및 예멘 난민의 유럽 유입으로 인해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국가들 내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및 EU 탈퇴 등을 주장하는 급진 정치 집단의 영향력 증가

2 군사: 핵군비통제의 모멘텀 상실과 군비경쟁 심화

○ 핵군비통제 모멘텀의 상실

- 2010년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으로 상징되는 미러간 핵군비통제의 동력 상실이 지속적으로 심화
- 2018년 2월 발표된 2018 핵태세보고서에서 INF 조약 탈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인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2018년 10월 20일 INF 조약 탈퇴 선언
- 2021년 2월에 효력 만료되는 New START의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이 이를 거부하는 등 향후 글로벌 차원의 핵군비통제 기조의 쇠퇴가 예상되며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핵군비경쟁 2.0 시대의 도래

-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국방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중국 또한 핵전력의 다탄두화 및 기동화 등 억제력 증진을 위한 경쟁적 노력을 배가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및 대위성무기 공격에 의한 핵지휘통제 마비 가능성 증가, 초음속 무기체계에 의한 핵전력 공격 가능성 증가 등 군사과학기술의 비약적 진보는 향후 핵보유 국가 간 핵억제의 안정성 저해 심화
- 이에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국가들은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핵순항미사일 및 신형 전술핵무기 개발, 다탄두핵미사일 배치 등 제2의 질적 핵군비경쟁에 돌입
- 미국의 INF 탈퇴 결정 등 미국의 압박에 의해 미국, 러시아, 중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신(新) INF 조약의 체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향후 강대국 간 핵군비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음

○ 재래식 군비경쟁 심화

- 미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170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중국 또한 2018년 전년도 보다 8.1% 증액된 1조 1100억위안이라는 역대 최대치 책정
- 또한 비록 러시아의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나토 국가들은 GDP 대비 2% 국방비 확보를 목표로 지속 증가하는 등 SIPRI는 범세계 국방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 표명
- 범세계적 민족주의 강화, 군사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한 안보 취약성 증가 등으로 인해 재래식 군비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 신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군사혁신 경쟁의 강화

- 소위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분야의 급속한 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초 미소 전자공학), 사이버, 양자과학, 지향성 에너지, 머신러닝, 네트워크 C3, 우주, 자율주행 및 극초음속 무기체계 등의 영역에 있어 각국의 투자 강화
- 미국은 2018년 7월 13일 국방부 국방획득 및 개발 담당 부서 개편 결정을 통해 신기술 영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는 등 신기술 분야의 선도를 위한 각국의 조직 개편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향후 신기술 분야의 군사혁신 경쟁 심화에 따라 신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개별국가 단위 및 국가 간 협력의 합종연횡 시대 도래 전망

○ 우주공간의 군사화 심화

- 사이버 공간에 이어 우주공간의 군사화 현상 심화 추이 지속
-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을 통해 2018년 말까지 미 우주사령부 (U.S. Space Command)를 재창설하여 현재 공군 예하의 우주사령부를 대체하는 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 포함
- 일본은 항공자위대에 우주부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8년 2월 대위성무기인 DN-3 발사에 성공하였음. 러시아 또한 “누돌 (Nudol)”로 알려진 PL19 대위성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
- 우주공간의 전장화 심화는 유사시 군사 작전의 핵심인 C4I 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폭시킬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국가 간 경쟁 가속화 예상

○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항로의 개방으로 군사적 기회와 도전 제기

-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으로 여름철 북극항로가 개방되는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군사적 기회와 도전 동시 발생
- 북극항로의 개방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등으로의 운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단축에 기여함으로써 교역의 경제성 증가
-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북극항로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가 및 군 차원에서 에너지 개발 및 상선들의 유류 및 수리부속 저장, 유사시 구호 등을 위한 해상 기지 확보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 그러나 동시에 북극해 항로에 상선 등의 활동 증가에 따라 각국은 순찰 등 군의 활동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어 갈등 가능성도 동반 증가하여 향후 이에 대한 대비 강화 전망

3 경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제4차 산업혁명 본격화

○ 범지구적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범지구적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2017년의 글로벌 경제가 2018년에 들어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임
- 선진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부터 성장 둔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8년 3.8%에서 2019년 3.5%로 낮아질 전망이며, 글로벌 경기의 재반등을 가져올 모멘텀 부족으로 경기하향 흐름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지구화 4.0(Globalization 4.0)’ 시대의 진입

-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지구화 4.0 시대의 도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음 네 가지 혁명적 변화 추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음
- ① 범지구적 경제 리더십은 이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이 아닌 ‘복수주의(plurilateralism)’를 중심으로 재편 ② 범지구적 국력 균형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본격 전이 ③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계에 가해지는 도전요소들이 사회, 경제적 변화 초래 ④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와 규모로 혁신

적 기술 발전

- 지구화 4.0 시대의 진입이 초래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각국의 적응 속도차이에 따라 향후 국력 및 국제적 리더십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가능성 및 부정적 영향 심화

-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2019년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세금경감 정책으로 2018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던 반면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9%에서 2.7%로 둔화 전망
-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2018년 6.6%에서 2019년 6.2%로 하락 전망이며 미중 무역분쟁 지속시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 불가피
- 흥미롭게도 2018년 11월 6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농업지역 및 러스트 벨트 등 미중 관세분쟁으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여전히 강한 현상이 발견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무역전략이 2019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 진입과 각국의 협력적 대응 가속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등 국제사회의 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주요 경제 대국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주는 기회와 도전에 대한 협력적 탐색과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이를 위해 세계경제포럼은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 ‘4차 산업혁명 센터(Centr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개설하여 국가 간 협력적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각국의 전문성 및 지식의 공유 그리고 공조를 위한 노력이 배가될 전망이다

4 사회: 민주주의 저하 및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 증가

○ 민주주의 저하와 권위주의 강화

- 스탠포드 대학의 정치학자인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2009년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recession)’ 시대를 경고
- Economist지의 2018 민주주의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7개국 가운데 89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
- 특히, 중국, 러시아,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의 중요 지역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향후 민주주의 약화와 권위주의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다 더 공세적인 외교정책과 국가 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내 정체성 위기 가속화

- 유럽 내 다수의 국가에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도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경제 및 문화 보호주의(economic and cultural protectionism)’의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적 움직임 크게 증가
- 향후 유럽 내 각국에서는 반이민주의 지속 증가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부감 확대가 예상되며, 국경개념의 부활에 대한 요구 등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 가짜뉴스의 확산과 사회적 혼란 증가

- 소셜미디어 공간에서의 소위 가짜뉴스(fake news) 확산이 세계 각국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등의 사례는 적대국가 또는 적대세력이 의도적으로 오보(misinformation)나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유통시켜 사회의 균열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 고양
- 가짜뉴스는 SNS 환경 변화로 인해 실제 사실에 근거한 소식 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영국 등의 국가들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AI 기술 진보 및 미디어 조작 기술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 지속 증가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간 갈등 및 분쟁 증가

-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이민자, 식수 및 식량 고갈, 어족자원 부족 등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지속 증가 추세
- 특히 수년간에 걸친 중앙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인해 기근, 노예 문제가 심화되면서 북아프리카, 유럽으로의 대규모 불법체류 및 이민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국가 간 갈등이 증가할 전망
- 또한 세계경제포럼의 부의장인 Mirek Dusek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라크의 바스라 지역이 경험한 심각한 식수 부족을 포함하여 UAE, 이집트, 모로코 등의 국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불안, 선거를 통한 급진세력 등장,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

제2장

동북아 정세전망

1. 정세개관: 미·중·일 삼국의 중층적 대결 심화와 경쟁 영역 확대
2. 미국의 동북아정책
3. 중국의 동북아정책
4. 일본의 동북아정책
5.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제2장 동북아 정세전망

1 정세개관: 미·중·일 삼국의 중층적 대결 심화와 경쟁 영역 확대

○ 미·중의 전면적인 대립 구도 심화 전망

- 2017년 9월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된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 몽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과거 위대한 미국의 회복은 역내의 근본적인 대립 구조 규정
- 미국의 2018년 7월 중국에 부과한 34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촉발한 미·중의 첨예한 경제적 대결이 중국의 양보가 가시화 될 때까지 지속 전망
-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매립과 기지건설, 영유권 확장정책 지속으로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미국의 자유통항작전 등 대 중국 견제 지속
- 미국은 2017년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 2018년 미국 고위공직자 대만 방문과 유사한 타이완 카드 강화 전망

○ 중·일의 가변적 대립 구도 지속

-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의도적 센카쿠 점속수역 진입과 일본 영해, 영공 침범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그레이 존 위협에 대한 일본의 양보 없는 대응 역시 강화 전망
- 경제 분야에서는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 시 합의처럼 미국의 통상 압력이 지속할 경우 협력이 가속화 할 전망

○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로 각축 심화와 경쟁 영역 확장

-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지속적으로 충돌과 대결을 양산하며 역내 대립의 동학을 형성할 것임
- 일대일로에 따른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의 친중국 행보 및 이와 경쟁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의 관계강화 등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 빈발
- 2018년 5월 태평양사령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개칭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지역 전반에 걸친 군사적 관심 제고

○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안보 국면 형성

-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북한 핵의 새로운 해결 노력 지속 전망
- 남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및 9월의 군사합의서 서명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를 통한 비핵화 공동 노력 계속
- 미국과 북한은 상호 비핵화 추진 방법과 순서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실한 성적을 거두어 당분간 비핵화 추진에 난항 예상

2 미국의 동북아 정책

○ 동북아 정책 기조

- 자국 우선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자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익 추구를 강화하면서도 대 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을 위한 동맹국과의 안보 공약 유지 및 공조 지속
-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며 역내 동맹과의 유대 강화 지속
- 경제적으로는 자국 이익 우선 추구를 지속하며 관련국과의 마찰과 갈등 지속
- 대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나 보다 신중한 태도 견지 예상

○ 대중 정책

- 전방위적인 압박과 견제를 통한 대 중국 우위 유지
 - 일본, 호주와의 동맹 및 인도와의 협력,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적극 추진
 - 인도, 일본과 함께하는 말라바 훈련 필리핀과의 발리카탄 훈련 등 역내 군사력 투사 계속하며 개별 국가들의 역량 강화 위한 지원 지속
 - 2017년 5월 25일 재개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통항작전의 지속, 무기판매 및 고위직 인사 방문 허락으로 구체화 된 대 타이완 카드 강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에 대해 제3차 상쇄전략 모색 강화

- 북핵 문제 관련 중국 협력 기대
 - 당분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지만 교착 상태 도달 시 중국의 협력 기대 가능성 상존

○ 대일 정책

-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에 의거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까지 포함한 전 영역에 걸친 지속적 안보협력 유지 및 이를 통한 중국 견제 강화
-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가 되는 미·일·호, 미·일·인·호 등 소다자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과 중층적 협력 강화
-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에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반영 시도부터 이시스 어쇼어 도입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공조 지속
-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익 확보를 위한 무역 구조 시정 요구 등 마찰과 긴장 요소 상존

○ 대한반도 정책

-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FFVD 방침 및 비핵화 이후 제재 해제 입장 고수하며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신중한 접근
-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는 상황을 경계하며 군사 분야 긴장완화 조치 속도조절 요구 전망
-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은 적으나 현실주의적 원칙에 따른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 상존
- 한국에 대한 무역구조 개선과 환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 상존

3 중국의 동북아정책

○ 동북아 정책기조

-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을 지속하기 위한 역내 안정적인 발전 기반 유지 노력
 -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며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상호 협력적 원칙에 따라 역내 대외관계 추진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강경한 행동 불사
 - 정보화 전력을 바탕으로 한 육/해/공군 및 전략연합군의 작전능력을 획기적 증강, A2AD 능력 증강, 투사전력 증강으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적 패권 달성 기도
- 국가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 없는 추구
 - 남중국해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일대 매립 및 군사기지 설치 가속화 등 9단선 영유권 주장 기정사실화
 - 2018년 4월 실시한 타이완해협 실탄 사격과 같이 타이완 독립 기도를 좌절 시키기 위한 행보 강행
 - 동중국해 센카쿠/다오위다오에 대한 부단한 공세적 행위 지속
- 일대일로로 적극적인 추진
 - 에너지 수송 딜레마 극복 위한 미얀마 치우큐프항, 파키스탄 그와다항 등에 대한 개발 협력 지속 추진
 - 협력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 일대일로 사업의 동력 유지를 위한 노력 배가

- 북핵 문제 해결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배치되지 않도록 북한과 협력 강화 및 필요에 따른 미국의 비핵화 노력 방해 가능성 상존

○ 대미 정책

- 중국의 이익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하는 주동작위의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실리적인 판단에 따른 절충적 행동도 가능
 -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드러난 대로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국의 이해 추구
 - 남중국해 문제와 타이완 문제에서 항공기와 함정의 근접비행, 항모 기동훈련 및 실탄 사격 훈련 등 양보 없는 대응 지속

○ 대일 정책

-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며 일본과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대결 강화
- 태평양으로의 해양진출로 확보를 위한 일본 근해 항로 통과 시도 지속
- 경제 분야에 있어 미국과의 대결에서 오는 손실 보충 및 이익 구조 다변화 위해 일본과 역사적 분쟁 등 불필요한 분야에서의 대결을 자제하고 협력적 정책 추구 기조 지속 전망

○ 대러 정책

- 미국의 역내 질서 주도권 약화를 위한 중러 협력 구도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보스토크 2018과 같은 연합 군사훈련 지속적 확대
- 러시아와의 협력을 동아시아에 한정하지 않고 2017년 지중해 일대 연합 해상 훈련과 같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

- 미국 주도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공동 반대자로서 역내 및 유엔에서 협력 지속

○ 대한반도 정책

- 북한 비핵화가 쌍중단/쌍궤병행의 틀 안에서 머물도록 지속적 영향력 발휘,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제
-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참여 방안 모색 지속
- 한반도 내 추가적인 THAAD 배치 저지 및 3NO 원칙 고수 강요, KADIZ 무단 침범 등 중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한 강압적 행보 지속 예상

4 일본의 동북아 정책

○ 동북아 정책기조

- 미일동맹의 지속적 강화 속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과 보통국가화 추진
 -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한 안보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노력 강화, 평화헌법 개정 통한 보통국가화 기반 조성
- 인도-태평양 전략의 적극적 추진으로 중국 부상 견제하며 두 바다와 두 대륙을 연결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장기적 경제 발전 및 전략적 우위 획득 노력 강력히 추진
- 북한 비핵화 과정에 소외되지 않으며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지분 확보 노력

○ 대미 정책

- 미일동맹의 강고한 발전 추구
 - 가이드라인의 개정 이후 집단적 자위권의 동맹 반영, 양국 간 연합훈련 확대 및 공동운용조정소 기능 발휘 등 군사적 협력 가속
-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 지분을 가진 협력자로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다자 기구 구성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합 훈련 확대
- 일본의 안전보장 제공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대가 추구 행위가 과도해질 경우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적극 TPP 활성화 등 독자적 행동 가능성 상존

○ 대중 정책

- 강력한 미일동맹, 호주,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에 기반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
- 영토 갈등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준비 강화
 - 육상 자위대 상륙전력 및 대함미사일 등 대상륙 방어전력, 독자개발 P-1 배치 등 해상 초계전력 강화, 아마자쿠라 훈련 등 미군과의 협력 태세 발전 강화
- 경제 분야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 및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보정 요소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협력 지속

○ 대러 정책

-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을 통한 영토 문제 해결 및 향후 경제적 발전 방향 모색 전망
 - 내년 초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방영토 문제해결을 위한 2개 도서 우선 반환 방안 제시 등 의욕적인 대러 전략 강화 전망
 - 북방 4개 도서에 대한 공동경제활동 확대 및 강화, 러시아 극동 개발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 시도 지속 전망
- 신동방정책에 따른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비한 안보정책 추구 가능성 상존

○ 대한반도 정책

-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납치문제 쟁점화를 통한 당사자화 노력 가속
- 역사 및 영토 문제 등 우리나라와의 마찰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을 고수

-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와의 안보협력을 시도하며 장기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 존재

5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 동북아 정책기조

- 총선 승리와 친위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통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공고화 도모
-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로 인한 서방과의 관계악화 회석과 극동개발을 위해 아시아 중시의 '신동방정책' 및 아태지역 협력강화 지속 추진
-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며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

○ 대미 정책

- 미러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초래된 서구와의 신냉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협력의사표명 등 관계개선 노력 지속 전망
- 역내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빚어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 추구 가능
-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영향력 증가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 노력 지속

○ 대중 정책

- 미국의 역내 영향력 지속적 유지와 동맹관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2017년 자파트, 2018년 보스토크 등 연합군사훈련 확대 등 중러 간 교류 협력의 강화 지속적 추진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협력 및 상하이 협력조직(SCO),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포럼(ARF),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등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중러 협력 확대 전망
- 에너지의 안정적 판로로 경제적 협력 강화할 것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 강화 견제

○ 대일 정책

-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적극적 시도 계속 전망
- 서방과의 관계 경색, 미러관계 교착에 대한 돌파구로 대일관계 활용은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옵션임

○ 대한반도 정책

-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인 원칙에 동의하는 가운데 한국·러시아·북한의 3국 공동 철도, 에너지, 전력 연결 사업에 대한 협력강화 추진한 국과의 향후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 추진
-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있어 대북제재의 실효성 부정하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 및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러시아 지분 확대 시도

제3장

북한정세전망

1. 정치: 정권 안정성 지속
2. 군사: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지속과 대체 전력 선택적 강화
3. 경제: <경제건설총집중노선> 구체화
4. 대외·대남: <경제건설총집중노선> 실현을 위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 추구

제3장 북한정세전망

1 정치: 정권 안정성 지속

○ 권력 핵심 및 신(新) 엘리트 그룹의 안정화

- 세대, 역할 별로 구획된 권력 핵심부 내의 균형
 - 국가 원로 그룹의 김영남, 당과 내각을 책임진 최룡해, 박봉주,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조용원, 박태성, 김영철, 황병서, 김수길 등의 균형적 역할 분담
 - 조직과 정책 모두에서 백두혈통 김여정의 위상, 역할 지속 강화
- 세대교체를 통해 창출된 신(新) 엘리트 그룹 안정화
 - 2018년 4월 7기 3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 위원 1명, 당 중앙위원 8명, 당 중앙후보위원 14명이 보선되는 등 인사교체가 소폭에 그침
 - 2017년 10월 7기 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한 평균 30~40%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교체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세대의 통치 그룹이 안정화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현(現) 권력 핵심과 신엘리트 그룹이 새로운 전략노선(경제건설총집중노선)의 실현 주체로 부상
 - 2018년에 국가전략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권력 핵심과 신 엘리트 그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새로운 전략노선의 안정화 및 실현에 주력할 것

-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던 황병서, 장성택 측근으로 알려졌던 문경덕의 복권을 통해 나타난 권력엘리트 관리에서의 자신감 지속

○ 당-국가체제의 제도화를 통한 개인 독재체제의 불안정성 보완

- 당-국가 체제의 정상작동을 통해 정치 제도화 지속
 - 후계체제의 개시 이후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통해 약화된 당-국가체제를 복원하기 시작
 - 2017년 7기 2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일단락된 ‘위로부터의 비상설 집단 협의체 복원’과 동년 12월 제5차 전당 세포 위원장 대회를 통해 일단락된 ‘아래로부터의 상설조직체계 강화’를 통해 ‘시스템을 통한 통치’ 제도화
- 정치 제도화를 통해 수령제에 의한 인격적 지배의 불안정성 보완
 - 정치 제도화는 사회주의, 권위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독재체제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인격적 지배의 불안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바, 북한에서도 동일한 효과 예상

○ 정책적 이니셔티브와 민족주의적 선전으로 김정은 리더십 강화

- ‘핵무력의 완성’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쟁취’도 모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하며 대중적 리더십 강화
 -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의 성취와 ‘자강력 제일주의’로 제재에 맞서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김정은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트 맹주국’을 이끄는 ‘민족의 수호자’로 포장해 왔음
 - 비핵화 국면에서 ‘주도적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쟁취하고 번영을 예비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는 논리로 변형하여 지속

- 평창 올림픽에 이은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 등의 파격적 국제 이벤트들을 통해 상기한 선전을 대중적으로 소비시키는 메커니즘 확대 강화
-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업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현 김정은의 리더십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농후
 - 외부 세계에 대한 피해 의식과 적대감을 기반으로 한 피포위 의식 (siege mentality)은 북한 정권을 지탱해온 주요한 동원의 자원
 - 제재의 장기화로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방식으로 상당기간 김정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유지할 것

○ 엘리트층의 조직적 이반 가능성 지속 관리

- ‘국가 의존형 엘리트 구조’지속
 - 북한 엘리트 구조의 핵심 특성은 최소화되어 있는 ‘규모’와 기득권이 국가와 정권의 제도와 조직에 기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산 특정성’(asset specificity)이 높은 구조
 - 유일영도체계, 극단적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 국가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경제구조는 한 번도 정치적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이 교체된 적이 없는 역사적 특수성과 결합하며 북한 엘리트의 국가 의존도 극대화
- 기득권 보장을 통한 엘리트층의 안정적 관리
 - 북한의 엘리트는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좁게는 당 중앙위원회 230여 명, 넓게는 약 300만 명의 평양 시민과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조선 노동당원들(양자는 상당수 중복)로 구성

-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시장에 대한 인정 혹은 방임과 맞물리며 권력과 이권의 결합을 통한 체제 친화적 기득권층 확대 재생산의 계기로 작동
- 지속적인 과학교육 중시 노선을 통해 지식 엘리트의 지지 유지
 - 과학과 교육 분야는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 핵심 분야로 병진노선의 결속과 새로운 전략노선이 입안된 7기 2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재차 강조됨
 - 김정은의 최초 업적이 12년 무상의무교육제 도입으로 선전되고, 평양 5대 신거리 중 4개(과학자들을 위한 은화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을 위한 여명거리)가 교육분야에 할당될 정도로 강조되어온 과학교육중시노선을 통해 지식 엘리트 관리 지속

○ 아래로부터의 저항(voice)과 이탈(exit)의 가능성 정체

- 시민사회는 단시간 내 붕괴나 체제 전환의 중요 변수로 작동 불가
 - 소련과 동구의 체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변수 중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불만 축적과 조직화였음
 - 현재 북한의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는 1980년대의 소련과 동구는 물론이고 1960년대에 비해서도 미약한 수준
- 체제 이탈의 수위 하향 지속
 -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남한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극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조사 이래 최초로 올해 1000명 이하로 줄 것이 확실시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농후

○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중요한 변수

- 정치적 안정성의 중요한 토대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여온 경제 상황
- 따라서 향후 제재의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경제 위기가 초래될 경우 정치적 안정성 역시 위협받을 가능성 농후

2 군사: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지속과 대체 전력 선택적 강화

- 병진노선 종료, 비핵화와 경제건설총집중노선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 강구
 - 3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 2018년 5월 17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내용 구체화
-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초기 조치로서 핵미사일 실험 중지
 -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한 ‘내부적 공약’ 이행
 -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별도로’ 최상위 정책결정 레벨인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병진노선의 종료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결의했으며 이는 북한 역사상 최초
 -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부적 공약’ 이행
 -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최초로 약속의 주체를 ‘김정은’으로 하는 비핵화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는 북한 체제 특성상 이전의 약속과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비핵화를 보완할 재래식 전력의 선택적 현대화
 - 핵과 미사일을 통한 억지력의 상실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 기반의 억지력 증강 가속화
 - A2AD 개념에 기반하되 최소한의 비용을 통한 억지력 향상을 위해 전력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방식 추진
 - 지난 2년간 국방과학원 현지도 중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제외한 현지도는 단 3번으로 이는 육, 해, 공으로부터의 접근을 억지하는 A2AD용 무기체계들이었으며 이러한 선택적 전력 강화를 지속할 가능

성 농후

- 2018년 11월 16일 신형장사정포로 추정되는 ‘침단전술무기시험’ 현지지도
- 2017년 5월 28일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 현지지도
- 2017년 6월 9일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켓 시험발사 현지지도

○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의 지속 이행 차원에서 무력 도발 중단 및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 추진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조치들의 이행 속도에 맞추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넘어선 군비통제로의 발전 모색

3 경제: <경제건설총집중노선> 구체화

- 2018년 4월 21일 7기 3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된 '경제건설총집중노선' 실현 노력
 - 박봉주를 정점으로 보다 강화된 내각 책임제 하에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개시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4차년도 목표 달성 추구
 -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변화와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변화로 구성된 '개혁'의 요소들과 특구, 경협 활성화를 통한 '개방'의 요소들이 포함된 경제건설총집중노선의 구체화
-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 변화 지속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확산
 - 현재 북한의 개혁 수위는 1980년대 초중반의 중국, 즉 개혁개방 초기 수준
 - 2013년 북한은 일련의 경제개혁 내용을 담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 결정
 - 국가에 바치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협동농장, 국영기업 등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체 분배를 허용하는 상기 조치 확산 전망
- 준수경제에서 민수 경제로의 자원배분 우선순위 변화 시도
 - 병진노선의 경제건설총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인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변경 시도

- 사회주의의 개혁개방에서 자원배분 우선순위 변경은 일종의 바로미터로 실제 혁명적 경제전략, 국방공업우선론, 선군경제노선, 경제혁명진노선 등 북한의 경제전략은 이를 기준으로 명명됨
-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내각 총리 박봉주가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것은 자원배분전략의 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
- 경제건설총집중노선 채택을 통해 이와 같은 흐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

○ 시장을 통한 비공식 경제에 대한 방임 정책 지속

-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015년의 396개에서 80여 개가 더 늘어난 480개로 확인된 시장의 확산 지속
- ‘생계형 기업가’를 넘어선 ‘사업형 기업가’, 즉 “돈주” 출현 증가
-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광업, 무역업,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사적 자본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 확산

○ 금융 기능 강화를 통한 화폐 경제 확산과 자본 흡수 시도

- 제재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단절된 상황에서 가능한 옵션은 내부의 자본을 국가가 흡수해 나가는 것이며 금융기능의 강화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은행 기능 활성화, 카드 사용 권장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 기능 강화 시도 지속
 - 금융기능 강화는 △원화의 기능회복(dollarization 억제), △사금융 억제, 세수 확대 및 부패 근절, △저축확대(시중통화량 감소)에 따른

물가안정, △제재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화폐개혁이나 공적 부분에 대한 사적 자본의 직접 투자 허용 등의 극단적인 자본 흡수 전략을 택하기보다는 금융 기능 강화를 통한 제도적 흡수 전략 추구

○ 경제특구(개발구) 활성화, 기간산업 개발 등 외부 자본 유치와 경협 활성화 시도 지속

- 김정은 시대 들어 지정된 국가급 9곳, 지방급 16곳 등 총 25개 경제특구 활성화 시도
- 철도, 도로, 항만, 도심 재개발 등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조립 사업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시도

○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의 침체와 개혁 후퇴 가능성

- 제재 국면이 지속 강화될 경우 북한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
 - 2019년부터 보다 강화되도록 예정되어있는 UNSCR 2397호는 기존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의류 수입 금지에 더해 일부 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 금지
- 경제제재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합리화,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 시장에 대한 방임 등 기존의 북한 경제 개혁과 관련된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
 - 현재의 속도로 외화가 고갈될 경우 북한은 계획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략 부분에 민간 외화의 투자를 허용하거나 강압적 방식으로 민간 외화를 흡수하는 극단적 방식 채택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
 - 전자는 사회주의 경제의 틀 자체를 침식할 가능성이 있어 후자의 가

능성이 높은 바, 이럴 경우 시장은 위축되고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은
후퇴할 가능성 농후

4

대외·대남: <경제건설총집중노선> 실현을 위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 추구

- 3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선포된 대외 정책의 당면 원칙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 마련” 시도
 - 비핵화 과정을 교차승인의 완성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방위 외교와 결합하려 시도
 - 국가 전략의 최상위 목표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3대 목표로 이루어진 바, 스스로 주장하는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을 새로운 전략노선의 목표로 채택
 - 특히 이와 같은 북한의 전략이 등소평이 주도한 대외전략, 즉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대외환경 조성을 제1의 목표로 삼은 개혁개방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일한 논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향후 북한의 대외전략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이슈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디자인을 특성으로 할 것
- 미국과의 비핵/평화 프로세스 모멘텀 지속 노력
 - 굴복의 프레임 하에 선비핵화론, 협상 무용론 등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자체와 분리함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을 지속하려 노력
 -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핵시설 폐기를 통한 ‘미래 핵’ 문제 해결과 핵무기 해체를 통한 ‘과거 핵’ 문제 해결 등 비핵화 작업의 속도를 조절할 것

- 선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발 지속 예상
 - 북한이 생각하는 현 상황의 핵심은 핵무력완성을 통한 선(先)비핵화론의 무력화와 ‘안보 대 안보’의 등가교환 쟁취
 - 따라서 ‘안보 대 보상’으로의 복귀 또는 선비핵화론의 논리에 서 있는 CVID론의 부활, 선(先) 핵시설 목록제출 및 사찰, 검증 등의 요구에는 강력히 반발할 것

○ 북중동맹의 황금기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 미·중 간 구조적 갈등의 심화라는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속의 최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
 - 시진핑이 제시한 북중관계의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三個不變)은 북중관계 역사상, 그리고 중국의 대외관계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 하 중국 수요 반영

※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

- ①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조선 인민에 대한 중국 인민의 우호적 정의(情誼)는 변하지 않는다.
- ③ 사회주의 조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변하지 않는다.

- 현 북중밀월은 미국과의 비핵/평화 교환 과정에서의 협상력 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해 동맹 강화가 절실한 북한의 요구와 상기한 중국의 지정학적 요구가 조응한 결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
- 다만 중국의 경우 협상 교착의 ‘책임론’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북한의 경우 ‘기만론’에 기반 한 불신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관리를 시도할 것

- 시진핑의 방북이 2019년으로 미뤄진 것은 이와 같은 ‘관리’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음

○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 지속

- 북중동맹 강화와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동시 추구
 - 중국이라는 단일 동맹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
 -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 러시아는 유럽/중동, 중국은 동북아로 영향력의 권역을 분할하고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 역시 북러관계 강화를 추동할 것
 -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노력 역시 긍정적 계기로 작동
- 김정은 방러를 통한 정상회담은 북러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제팬 패싱(Japan passing)의 구도를 활용한 일본 압박 지속

- 대북 레버리지를 거의 상실한 일본의 약점을 활용하며 향후의 대일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
 -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위한 북한 위협의 정치적 활용과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전략적 인내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현 프로세스에서 한발 뒤처진 상황
 - 그러나 미일 동맹 하의 일정한 역할, 유엔사 문제의 해결, 대일 청구권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제팬 패싱은 불가한 바, 다양한 경로로 협

상을 모색할 것

○ 남한의 길잡이 역할에 편승하며 남북협력 지속 강화

- 4.27 판문점 선언과 6.19 평양 선언 이행 가속화
 - 대북제재로 한계가 있는 경제적 분야보다는 남북군사합의서에 기반한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 선도적으로 진행될 것
 - 그러나 한민족 프레임을 강조하며 경제문제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압박할 가능성 농후
-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

제4장

국내정세전망

1. 정치면

2. 군사면

3. 경제면

제4장 국내정세전망

1 정치면

-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현정부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고조와 정책추진 강도 강화
 -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현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경제정책의 실현 추진 및 성과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석 및 평가 표출
 - 현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고조와 더불어 기대치에 못미치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불만도 동시에 증가
 - 현정부의 성공적인 집권 및 5대 국정지표의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추진 실행
- 현정부의 평가에 대한 정치권 대립구도 심화
 - 현정부의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여야갈등, 이념갈등, 정책갈등의 형태로 표출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립구도 심화
 - 2019년 4월 재보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립 및 갈등 표출의 첨예화 현상 발생
 - 재보선 결과에 따른 각 진영의 쇄신 노력 강화
- 진보와 보수 및 각 진영의 이합집산 가속화
 - 야권은 현정부 비판 강화와 더불어 현정권의 집권 3년차 증후군¹⁾ 유

1)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측근 비리나 인사 · 정책 실패, 당청 갈등 등으로 인해 권력누수 및 지지율

발을 통한 권력누수 시도

-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각 진영 간 이합집산 확대
- 특히 야권은 합당을 통한 정계개편 시도

2 군사면

○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추진

-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강한군대’, ‘책임 국방’구현의 실행계획 전면적 실시와 전작권 환수추진 역량 강화 추진
- 장군 정원감축, 상부 지휘구조 및 군구조 개편, 병력 감축, 부대축소, 병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한 과학기술기반의 정예화 추진
- 실행계획 추진과정에서 적정수준의 속도조절에 대한 이견 표출 동반
- 국방개혁에 따른 국방예산증대의 필요성과 경제성장률 증가 저조로 인한 현실적 제약의 모순 내재

○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에 따른 기대감과 불안감 교차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증가와 서해 및 수도권 방어공백에 대한 불안감 교차
-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이념 및 진영 간 이견 지속적 표출

○ 한미동맹 및 유엔사의 미래에 대한 논의 활성화

- 남북한 교류확대 및 종전, 평화협정의 요인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과 유엔사의 지위에 대한 논의 활성화
- 논의 과정에서 이념 및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발현

3 경제면

-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적 미충족에 따른 불만 교차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집권 3년차 현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발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고조
 - 세계경제 성장의 소폭 둔화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 및 부작용에 대한 비판 지속
 -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찬반 논란 및 부작용에 대한 비판 지속
 -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족이 현실적으로 제한됨으로써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요인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 내재
- 물가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불안요인 내재
 - 2018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인해 2019년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나,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세 둔화로 인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지속 추진과 이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내재
 - 성장세 둔화 및 내수 부진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의 지속적 강화추진과 현실적 제약
 - 현정부의 최대 공약사업의 하나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적 강화
 -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의 획기적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 난망

제5장

안보정세종합평가

1. 세계정세

2. 동북아정세

3. 북한정세

4. 국내정세

제5장 안보정세종합평가

1 세계정세

○ 기회요인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퇴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프랑스·독일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 추이에 대한 시각과 해법을 공동 모색 가능
- 다자주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고 소다자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는 한국의 중진국 외교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 한국은 소다자주의 시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적, 제도적 투자 강화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부상은 주변 강국과의 잠재적 분쟁 대비를 위한 한국의 비대칭적 군사력 확충의 기회 제공. 한국은 신기술 영역 중 독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투자 분야와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4차 산업혁명센터’ 개설 등 선진국들의 협력적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전문성의 확충과 한국의 정책 대안 마련에 기여 가능
- 북극항로의 개방으로 인한 물류비용 감소 및 자연자원 개발 가능성을 한국의 경쟁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노르웨이·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유류 등 보급기지와 비상 시 구호시설 및 장비 확보 추진 가능

○ 도전요인

-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선언 등 핵군비통제의 모멘텀이 상실되고 핵전력 확충 경쟁이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는 북한 비핵화 시도에 부정적 영향 가능
- 미국 및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란발 중동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하여 원유 수입선 다변화 검토 및 관세 증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검토
- 기후변화의 영향 본격화에 따른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남미 등의 정세 불안정 증가. 특히 이민, 식수, 어족자원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의 무역, 원유확보 등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 예멘인 등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이 지속되는 추세로 인해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예상
-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균열 등 부정적 영향이 증가되는 추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AI 기술 진보 및 미디어 조작 기술의 확산 등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타국가와의 협력적 대응이 요구됨

2 동북아정세

○ 기회 요인

-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호 각축을 지속하면 대상국들이 제3의 선택지를 희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우리가 각 전략의 대안으로 기능하며 이익을 창출할 기회 발생 가능
-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해당 지역 국가에 진출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북한 비핵화 방식의 변화에 따른 평화체제 도래의 가능성 증대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남북 경제 발전 가능성 상존
-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될 경우 러시아가 구상하는 철도, 가스 등의 연결 외에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북한 개발 및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 존재
- 중국의 부상이 심화될 경우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이 연계한 협력 체계의 출범을 모색할 가능성 존재

○ 도전 요인

- 미국과 중국의 대립,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의 대립 가운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며 한국의 선택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 관련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안보적, 경제적 손실 불가피
- 역내 갈등과 긴장의 확대에 따른 지역안보질서의 재편과정으로 인해 한반도 및 지역안보질서 불안정성 증대

- 미국의 국익우선 전략으로 인해 한미동맹 분담금 및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력 가중
- 중국의 군사개혁 및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따른 방위력 증강 추진으로 인한 역내 군비경쟁의 고조
- 미 하원을 민주당이 지배하게 되어 북한 비핵화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면 북미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2017년 상황으로 후퇴할 위험성 상존

3 북한정세

○ 기회요인

- 제재의 강력한 효율성(efficiency)
 -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21, 2371, 2375호의 특성은 광물 및 수산물, 섬유, 노동자 송출 등 WMD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북한경제 일반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
 - 해당 조치로 인해 북한 경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북한의 외화보유고는 급격히 소진될 가능성 농후
 -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 반영
- ‘손실영역’으로의 진입과 강력한 ‘현상타파’ 압력
 - 미국 본토타격능력 확보를 위한 My Way 전략을 구사하던 이전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불리해지는 ‘손실영역’에 진입
 - 손실 영역으로의 진입은 현상타파의 압력이 증대된 것을 의미하는 바, 북한은 현재의 전략적 전환의 구체적 성과를 단시일 안에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김정은 시대 이후 엘리트와 권력의 결합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에서 경제적 특혜로 이동했다는 점 역시 고려점
 - 지도자가 직접 나서 급격한 전략과 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만큼 정치적 부담 증대
- 김정은의 공고한 리더십과 의지

- 당국가 체제의 복원과 결부된 조직, 제도적 차원의 안정화, 핵심 그룹의 세대교체를 통한 엘리트 차원의 안정화 등을 통해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 북한의 전략노선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추동력은 김정은과 핵심 엘리트 집단의 강력한 의지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은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있어 주요 기회요인

○ 도전요인

- 굴복 프레임 및 회의론의 부상과 미국 측 동력 약화
 - 손실영역에서 조급함을 내비치고 있는 북한측 신호는 현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를 변화시킬 가능성
 - '조급함'이 '취약성'으로 평가될 경우 굴복의 프레임이 재부상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골대를 옮기며' 협상의 레버리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가능성
 -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북한은 믿을 수 없으며 또다시 속고 있을 뿐이라는 회의론이 부상할 가능성 상존
 - 2019년은 미국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 역시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변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전환을 향한 북한 측 동력 약화 가능성
 - 경제건설총집중노선은 단순한 부국강병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전통적인 자원배분 '방식'과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한 '개혁'의 요소들 포괄

- 국가급 9곳, 지방급 16곳 등 총 25개 지역의 경제특구 활성화 시도는 ‘개방’의 의지를 내포
- 개혁과 개방을 통한 변화의 과정은 기득권의 재조정 과정을 포함하는 바, 이로 인한 내부로부터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필요
- 교착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제재와 봉쇄 조치들이 장기화될 경우 변화의 동력 역시 약화되거나 소진될 가능성 농후
- 병진노선의 부활을 언급한 북한의 경고에서 보듯 경제건설총집중노선의 실패는 병진노선의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
- 비핵화의 기술적 어려움
 - 북한 비핵화는 자체적으로 완결된 핵무기체계를 완성한 이후 비핵화가 진행되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
 - 유사한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나 핵무기의 양과 고도화의 정도, 안보위협 정도, 총체적 군비의 수준 등 모든 부분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기술적으로 보다 난이도가 높은 상황
 - 정치적 의지와 별도로 상기한 기술적 어려움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신뢰의 부족과 결합하며 신고, 동결, 불능화, 폐기, 검증 등 모든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 농후

4 국내정세

○ 기회요인

- 북핵문제해결 및 남북한 교류확대와 관련한 긍정적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 결집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확대를 위한 국론 통일 가능
 - 북핵문제 및 남북한 긴장완화의 진전은 이념과 진영 간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현정부에 대한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국내정치의 안정요인으로 작용 가능
- 2019년 재보선 실시와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과정에서 각 진영의 자발적 쇄신 및 헌법개정과 정계개편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정치개혁을 통한 국가발전 신동력 확보 가능
- 현정부의 경제정책추진을 통해 양극화 문제의 부분적 해소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적 통합에 기여

○ 도전요인

- 지속적인 여야, 이념, 진영, 정책 갈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의 심각한 분열 초래 가능성
- 북핵 및 남북 긴장완화와 관련한 진전이 지지부진하거나 부정적일 경우 현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정치불안 발생 가능성 내재
-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중장기적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 내재

제6장

결론 및 대비방향

1. 대외정책

2. 대북정책

3. 국내정책

1 대외정책

〈세계적 차원〉

○ 정치

- 프랑스·독일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미국의 대전략 변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체계, 미러 관계 및 미중 관계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상 공동 분석 및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
- 한국은 중진국 외교력 강화를 위한 인적, 제도적 투자와 정비를 통해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및 리더십 발휘 능력 증진. 궁극적으로 범지구적 다자주의 퇴조 시대에 대한 대비 강화 필요
- 기후변화, 핵군비통제 등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심 및 역할 증대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 분석 및 대유엔 외교 노력 증진 필요

○ 군사

- 강대국 핵 경쟁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주변 강국들의 핵전략 및 전력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범정부적 평가제도 마련 및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 변화에 주는 함의 도출 요망
- 사이버 및 우주 무기의 진보가 핵지휘통제 등 군사작전에 가하는 도전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급속히 진화하는 신기술의 전략적, 작전적 함의 분석을 통해 주변 강국과의 잠재적 분쟁 대비를 위한 한국의 비대칭적 군사력 확충의 기회로 활용

-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선진국들의 협력적 대응 노력의 방향성과 내용을 확인하고 '4차 산업혁명센터' 등 한국판 군사혁신을 위한 전문성과 동력 마련 필요
- 북극항로의 개방이 주는 경제적 기회의 활용을 위해 프랑스·노르웨이 등의 국가들과 국방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유류 등 보급기지와 비상시 구호시설 및 장비 확보 추진 필요

○ 경제

- 미국 및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란발 중동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하여 원유 수입선 다변화 검토 및 관세 증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검토 필요
-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른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남미 등의 이민, 식수, 어족자원 분쟁 추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한국과의 무역 갈등 및 테러 증가 가능성 대비 필요

○ 사회

- 예멘인 등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의 이민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타국의 사례 분석 및 교훈을 국가정책 변화에 반영 필요
-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균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짜뉴스와 AI 기술의 결합 그리고 미디어 조작 기술의 확산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범정부적 연구 및 대응 제도 마련 및 타국가와의 협력적 대응 필요

〈동북아 차원〉

○ 대미 정책

-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여 안보 태세를 공고화하며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추구에 대비
- 북한 비핵화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며 상호 합의 하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관계 정립과 국익확보 적극 추진
- 중간선거 결과 이후 새로이 형성된 미국 국내 정치 환경에 부합한 대미 외교정책 수립

○ 대중 정책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상호 마찰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국익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 표명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확대와 한중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대화 강화
- 한국의 안보정책에 중국이 일방주의적 행태로 개입하지 않도록 대중국 설득 및 다각적 외교 노력 경주 및 대중 군사협력 지속
- 일대일로에 대한 추적과 분석 통해 기회 요소 발굴 및 활용 시도

○ 대일 정책

-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 일본이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평화체제 정착에 참여 기회 보장하여 일본의 역량 활용 방안 모색

- 역내 대립과 갈등이 강화하는 상황에 따른 한국의 중견국 역할 확대 모멘텀 형성 및 안보 협력 위해 역사 및 영토 문제가 외교 문제로 쟁점화 하지 않도록 한일 정치지도자 간의 합의 필요
-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모색하여 기회 요소 발굴 및 적극적 활용
- 그동안 유지하여 오던 공동 구조훈련 등 군사분야 협력을 지속하고 인적 교류를 확장하는 등 대일 안보협력 동력 강화

○ 대러 정책

-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이후를 내다 본 러시아와 남북한 공동철도, 에너지, 전력 연결 사업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 참여 등을 통한 경제적 협력 확대 추진
- 비핵화 프로세스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에 경사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2 대북정책

○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의 지속에 대비할 필요

- 현 상황은 양측의 선언적 비핵/평화 프로세스 진입을 넘어선 실질적 비핵/평화 프로세스로의 전환의 초입
- 실질적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양측의 '행동'이 필요한 바, 행동의 대칭성과 관련한 밀고 당기기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교착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농후

○ 교착상태의 위험 1 : 비대칭성

- 현재의 상황은 본토위협 노출과 병진노선의 한계 속에 선비핵화 후평화론과 선평화 후비핵화론의 평행선을 극복하고 안보 대 안보의 동시적/포괄적 교환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입구에 들어선 초기 동력이 '비대칭적으로' 소진된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으로 위협의 증대 즉 미국 측 손실의 증대를 '중단'했으나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 측 손실의 증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비대칭성'의 핵심
- 따라서 북한은 현 교착상태의 해소, 즉 현상타파의 압력을 크게 느끼는 반면 미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전제하에 양보를 강제하는 '굴복의 프레임'의 유혹을 점차 강하게 느끼게 될 것
- 이와 같은 비대칭성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행동'을 통해 현상타파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 교착상태의 위험 II : 한국정부의 위상과 역할 저하

- 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변화 지점은 북한이 최초로 남한을 비핵화의 핵심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점
-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비핵화와 교환하려는 등가의 안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할에 근본적 한계
- 향후 북·미간에 비핵화를 둘러싼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의 교환이 본격화될 경우 이는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

○ 대책 I: 적극적인 어젠다 세팅을 통한 존재감 유지

- 한국의 역할 축소를 막는 핵심은 현 프로세스를 비핵화 자체가 아닌 비핵화를 포괄하는 평화구축의 과정이자 소극적 평화를 넘어선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
- 한반도를 평화, 그리고 평화를 통한 번영의 상징으로 적극 홍보해나감과 동시에 그러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젠다 세팅을 주도해나갈 필요

○ 대책 II: 전환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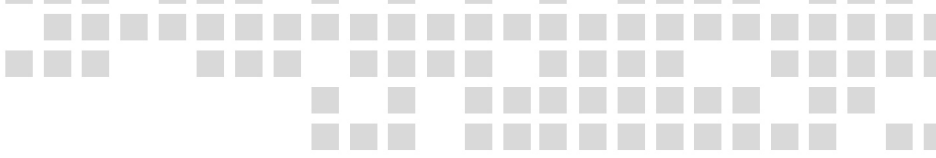
- 교착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북한의 좌절감을 관리해야 함
- 스포츠, 문화, 기술공유, 학술교류, 경제교류의 본격화에 대비한 제도화의 노력 등 제재를 우회할 다양한 교류협력 이슈와 채널 확보 노력 필요
-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능력 감축보다는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군사부분 협의와 협력 지속

○ 대책 III: 전환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견인

- 기 마련된 한미간 워킹그룹을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함으로써 비핵화를 앞선 남북트랙의 강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
-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긍정적 기류 형성을 위해 미국 의회 및 싱크 탱크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과 실천 필요

3 국내정책

- 북핵문제해결 및 남북교류협력확대에 대한 국론 결집
 - 북핵문제해결 및 남북교류협력확대에 대한 이념과 진영 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노력 강화
 - 북핵문제 및 남북긴장완화의 진전을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활용
- 정치권의 소모적 이념 대립 및 갈등 방지 노력 필요
 - 여야, 이념, 진영 간 상호소통을 위한 대화와 협력 기제의 수립 및 추진 필요
 - 국민여론의 분열과 갈등, 정치적 냉소주의 발생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통합 노력 강화
- 국방개혁 2.0의 본격적 추진과 안보태세 확립
 - 과거의 지지부진했던 국방개혁과 달리 수립된 계획에 따른 차분하고 내실있는 개혁 추진
 -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비태세의 확립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 수립 및 추진
 -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추세에 대한 대응책 수립 필요
 - 경제성장 둔화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성장 추진 강화
 -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2019년 안보정세전망

2018년 12월 28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저 자 안경모, 이병구, 손경호, 하도형

편집·발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el. 041-831-6412

홈페이지 <http://www.kndu.ac.kr/rinsa>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SSN 2586-3673

〈비매품〉



2019년도
안보정세전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빌로 1040
tel. 041-831-6412
<http://www.kndu.ac.kr/rinsa>

